

野 “정부, 대일 굴욕외교… 강제동원 올곧게 해결해야”

여야 3·1절 논평…국힘 “미래 위해 노동·연금·교육 개혁 미룰 수 없어” 민주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한국기업이 대신”…정의 “잘못된 정책 맞설 것”

여야는 3·1절인 1일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한 목소리로 기리면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힘의힘은 이날부터 소집된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국힘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습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3·1운동은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숭고하게 계승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의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에 날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등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일제

의 식민 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온 마음을 다해 기린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3·1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아직도 미완의 역사”라며 “일본은 여전히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

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3·1운동으로 걸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과 전범 기업 사과를 받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올곧게 해결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3·1운동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하라” 3·1절을 맞아 일본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1일 도쿄 지요다구 재일본 한국 YMCA에서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정숙, 안민석, 임종성,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지지층, 비명계 문자폭탄 중단을”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체포안 표결 사태, 갈등 계기대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이태원 사태가 벌어져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사태를 두고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고위전략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의원들은 중단해주시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의원 및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해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거 이태원과 관련,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수박’ (겉과 속이 다름, 비이재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에 나서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도부는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장식 사무총장은 “민주당 전체 의원의 뜻을 당을 위한 것임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당 대표와 지도부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여러 의견 수렴해 민주당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대표 사퇴 등 거취 표명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청하겠다는 내용(회의)이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시·도지사에 ‘거래 공정성’ 조사권 부여

윤영덕 의원 4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다. 지자체가 조사해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의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정위가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조사만이라도 공정위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진행하면 의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돼 불공정거래 관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순신 파장에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목소리

졸업 후 2년→10년 연장 법안…교육계 “학생 진로 방해 우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폭력(학폭) 전력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학폭위 조치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

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 8호(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 9호(퇴학)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2호는 여전히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지만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기재

하도록 규정했다. 삭제 불가능한 9호를 제외하면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겨져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인 대입에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학폭위 조치를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